

원데이 헌법 기출풀이

시험명	법원행시 (헌법 객관식)
시험일	2018. 8. 25.
적중률	97.5%
미적중	문제 9번

정답표(1책형)	
52211/53235/55531/15532	
51424/21513/55442/45222	

항상 최신경향을 유지하기 위한 교재 업데이트용입니다
정답위주로 간략히 해설됩니다

문제 1번	
정답	⑤
교재	헌법 제34조 관련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위헌과 합헌을 구분하는 문제는 미리 확실히 정리만 해두었다면 쉬운문제에 속함. ②위헌만 확실히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합헌결정례임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위헌은 2개뿐이다 : 1.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의 결정·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진정행정입법부작위)(2000헌마707), 2. 출퇴근 재해 사건 (2014헌바254)

문제 2번	
정답	④
교재	-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기관의 자유, ㉣Access권(평등권에 근거X) - 알 권리의 성격 :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표리일체 관계)
노하우	알 권리는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님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미리 정리(위판총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인 기본권에 해당
--	--

문제 3번	
정답	②
교재	국선대리인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시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국선대리인 결정일(X))을 기준으로 정한다(헌재법 §70 ①)
노하우	①청구기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리 정리 요망. ②확실히 맞는 ‘가’ 지문을 살리고, 확실히 틀린 ‘라’ 지문을 제거하면 2번만 정답이 됨. ③지엽적인 것까지 모두 묻는 법학 지문은 절대 완벽히 공부할 수 없으므로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

문제 4번	
정답	①
교재	헌재결정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u>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u> 따라서 <u>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u>”(헌재 2003.10.30. 2000헌바67)
노하우	①지문 모두 상식적인 지문. ②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을 인식.

문제 5번	
정답	①
교재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7개 항목)
노하우	①헌법 조문 문제. ②헌법 제89조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함.

문제 6번	
정답	⑤
교재	대법원장:70세 대법관:70세 판사:65세
노하우	①대법원장과 대법관 정년은 70세까지임. ②법관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관 정년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함.

문제 7번	
정답	③
교재	■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 : 헌재결정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헌재 2011.12.29. 2010헌바54)
노하우	①언어영역 ②상식적으로 판단하여 푸는 문제 ③아래는 푸는 방법 예시 : ㄱ지문은 상식적으로 옳은 지문. : ㄴ지문은 교재 내 있는 내용. : ㄷ지문은 상식적으로 옳은 지문. : ㄹ지문은 신문 불매운동도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임과 동시에 ㄴ지문과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는 매우 넓음을 유추하여 틀린지문임을 도출. : ㄷ지문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지문. 형법을 공부하였으면 더욱 쉽게 틀린지문임을 도출할 수 있음. ④정답 도출이 사실상 어렵지는 않았음(혹여 틀려도 합격에는 무방).

문제 8번	
정답	②
교재	■ 재판공개 원칙 :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 비송사건절차에는 적용 X, ‘심리·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명령 등(공소제기절차 or 공판준비절차 or 소송법상의 결정·명령 or 수명법관이 수 소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거조사)에 적용 X / 심리의 비공개 (①국가의 안전보장, ②안녕질서, ③선량한 풍속) But ‘판결’만은 반드시 공개!
노하우	①예상하고 있던 지문. ②판결만은 반드시 공개해야 함!

문제 9번	
정답	③
교재	(교재 미적중) ■ 헌재결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해석 하여야 한다.” (합헌 - 헌재 2014.08.28. 2011헌바50)
노하우	①생소한 지문이 정답지문(당황하지 않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함. ②언어영역 ③소거법 적용 ④보기 1번, 2번, 5번은 옳은지문임이 확실. ⑤보기 3번과 4번 중 3번이 “...타당하므로, ...” 식의 유도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지문 확률이 높음.

문제 10번	
정답	⑤
교재	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 취급 ■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 적용중지O(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 비소급(2014두35447))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 법적 혼란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잠정적용O, ㉡ 수혜적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적용중지O
노하우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잠정적용이 되는 경우와 적용중지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문제 11번	
정답	⑤
교재	①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위헌 - 헌재 2012.08.23. 2010헌마47) 반대결정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합헌)
노하우	①중요 비교판례. ②인터넷 실명제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중인지 여부를 따지는 위헌과 합헌이 공존하는 사건.

문제 12번	
정답	⑤
교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위헌과 합헌 구별! ②ㄱ의 경우 언어영역(상식적으로 판단)

문제 13번	
정답	⑤
문제	■ 헌재결정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

	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외국인)사이에서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의 차별은 상호주의가 문제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정부수립 이전의 국외이주자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 사건(잠정적용 헌불 - 헌재 2001.11.29. 99헌마494),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12.08.23. 2008헌마430) ★
노하우	①인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와 무관. ②지문 반대로 생각해보기 적용. ③소거법 적용

문제 14번	
정답	③
교재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의 자유 제한 내용 - 통신제한조치 : 국가안보 관련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지체없이'(36시간 이내(X)) 허가 청구
노하우	통신비밀보호법 숙지.

문제 15번	
정답	①
교재	기본이론
노하우	①기본이론 문제(기초)

문제 16번	
정답	①
교재	■ 의사공개 원칙 :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모두 공개원칙(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공개 X, '국회 방청권'은 헌법상 명시 X - 국회법상 방청권 명시 O) [cf]정보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국회법 §54의2) /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57) ■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비교 <u>의장은</u>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교섭단체대표의원(X))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소관문제)
노하우	①ㄴ, ㄷ, ㄹ는 확실히 옳지 않음. ②ㄱ의 경우 알 권리는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상기! ③ㄴ의 경우 원데이 헌법 교재 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비교 도표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함.

문제 17번	
정답	⑤
교재	■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헌재결정 “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 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각하 - 헌재 2016.05.26. 2015헌라1)
노하우	①5번이 명백히 옳지 않은 지문 ②소거법을 적용하더라도 5번이 확률상 가장 옳지 않은 지문. ③피청구인 적격으로 함정놓기 좋다는 점 명심!

문제 18번	
정답	⑤
교재	■ 법관의 신분보장 : ㉠'파면'사유에 제한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의 종류 - 정직·감봉· 견책 의 '3종'(파면과 해임은 징계에 포함 X) / 법관징계위원회 징계(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아닌 자도 참여 <u>可</u> / 징계청구의 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예외:5년) / 징계'심'의는 공개X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불복은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60일(X)) 이내에 바로 대

	법원에서 단심으로(→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주의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X), ㉡법관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X), ㉢법관의 파면과 '정직'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X) ★ ■ 법관의 '강제퇴직'의 제한(1개) :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① 대법관의 강제퇴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이 퇴직명령), ②일반법관(판사)의 강제퇴직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명령) ★ ■ 법관의 금지사항 : ①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②행정부서의 공무원, ③정치운동에 관여, ④대법원장의 ' 허가 없이 '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 ⑤'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허가 불문), ⑥대법원장의 ' 허가 없이 ' 보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법원조직법 §49) /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52)
노하우	법원직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정리는 필수!

문제 19번	
정답	③
교재	■ 처분적 법률(한시법도 포함) : 헌재결정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 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 재판적·사법적 법률이 아닌 한 '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집행적 성격+개별적 성격) 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출퇴근 산업재해 사건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거 합헌 → 헌불(헌재 2016.09.29. 2014헌바254))
노하우	①소거법 적용 ②3번만 정답 가능

문제 20번	
정답	②
교재	■ 정당설립의 자유의 근거 : 99헌마135 결정 → §8①(제도보장) + §21①(기본권), 2004헌마456 결정 → §8①(기본권)
노하우	① “...아니하므로 ...” 식의 유도지문을 조심하자!

문제 21번	
정답	⑤
교재	■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순서 :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 미래창조과학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구 행정자치부장관) ...
노하우	① 권한대행 4순위까지 물어보는 생소한 문제. ② 법행이라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

문제 22번	
정답	①
교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도표 참조.
노하우	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구분하는 문제는 빈출된다. 미리 확실히 정리!

문제 23번	
정답	④
교재	■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부과·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제정 및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 / 과세요건명확주의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금지 But, 예외 可 (주의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도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 / 엄격해석의 원칙 (확장해석 X, 유추해석 X(주의조세 ‘감면’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 →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 해석도 마찬가지(조세공평의 원칙))
노하우	① 교재에서 예상하고 있던 지문 ②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할 것을 요

구!

문제 24번	
정답	②
교재	■ 헌재결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를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노하우	① 함정조심! ② 지문을 꼼꼼히 읽자!

문제 25번	
정답	④
교재	평등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 합헌과 위헌을 구분하는 지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됨!

문제 26번	
정답	②
교재	■ 헌재결정 “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 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시정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11.29. 2012헌마53)
노하우	① 2번이 명백히 옳지 않은 지문. ② 그렇지 않더라도, 소거법 적용으로 해결!

문제 27번	
정답	①
교재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 포함 (O), 위헌법률심판(X))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담당하게 하여야 한다(X)).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과반수(X))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후 30일 경과시까지 각하결정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으로 간주한다(헌재법 §72). ㉣헌법소원 각하 or 회부결정시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등)통지하여야 한다(헌재법 §73) ★
노하우	①1번이 명백히 옳지 않은 지문.

문제 28번	
정답	⑤
교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5개)
노하우	①합헌과 위헌을 구분하는 지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됨! ②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헌은? → 5개 → 5개는 무엇? 차례로 연상할 수 있어야 함.

문제 29번	
정답	①
교재	■ 대법관회의와 대법관전원합의체의 구별 도표 참조
노하우	①모두 옳은 지문. ②특히,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은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법관회의에서 의장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조심하여야 함.

문제 30번	
정답	③
교재	■ 헌재결정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야 할 원칙이다.”(헌재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 비교 헌재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 제청시에만 재판의 전제성 필요(소송정지 없음)
노하우	①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을 구분!

문제 31번	
정답	⑤
교재	■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부통령(국무총리(X))의 재판장, 부통령 심판시 대법원장이 재판장)를 규정
노하우	①시험 전날 혹은 시험 당일 오전에 헌정사 도표를 이용하여 헌정사를 반드시 정리할 것! ②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가 각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

문제 32번	
정답	⑤
교재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합헌과 위헌을 구분하는 지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됨! ②위헌만 확실히 암기하고, 처음 본 판례 혹은 낯선 판례 등은 모두 합헌임!

문제 33번	
정답	④
교재	■ 감사원의 기각결정 : 헌재결정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 → 헌법소원의 대상O” (기각 - 헌재 2006.02.23. 2004헌마414)
노하우	①소거법 적용. ②가장 확실하게 틀린 지문을 고르자!

문제 34번	
정답	④
교재	■ 대법관회의와 대법관전원합의체의 구별 도표 ■ 대법관 전원합의체 전속사항 : ①명령·규칙 등 위헌·위법 여부 심사 ②대법원판례의 변경 ③부에서 재판함이 부적당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
노하우	①위헌제청의 경우 대법원을 경유해야지만, 대법원이 불송부할 권한은 없음을 반드시 주의!

문제 35번	
정답	②
교재	국회정족수 비교 도표 : 일반 의안 발의 10인 이상
노하우	①소거법 적용 ②시험 직전 국회정족수 비교 도표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함!

문제 38번	
정답	②
교재	재산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 확실히 암기 !!!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합헌과 위헌을 구분하는 지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됨! ②위헌만 확실히 암기하고, 처음 본 판례 혹은 낯선 판례 등은 모두 합헌임!

문제 36번	
정답	④
교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정리 ★ 헌법소원 적법 : ① 고발권 불행사(보충성의 예외), ② 무혐의 조치(다만,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자기관련성 없음으로 제외), ③ 심사불개시결정(민원회신)
노하우	①소거법 적용 ②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결정례 정리 도표를 통해 관련 내용 한번에 정리해두기. ③정답 지문 외 2018년 법원직 9급 기출지문과 동일한 지문도 해당 문제에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도 함께 정리하면 효과적임.

문제 39번	
정답	②
교재	주의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결 2016.11.10.2015모 1475)
노하우	①간통죄 사건 관련하여 주의해야하는 대법원 결정 내용이 그대로 적중.

문제 37번	
정답	⑤
교재	■ 현재결정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f] “연금동결조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연금액이 동결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헌마101)
노하우	퇴직연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점 명심.

문제 40번	
정답	②
교재	■ 국무총리의 임명 : 제2차 개정헌법(195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국무총리제 有
노하우	국무총리제 관련 내용 미리 정리.